'현대車 수사' 전방위 압박

MK父子 승계과정 전면 추적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수사 박차
그룹차원 각종 탈·불법 의혹 조사

검찰이 3일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별도로 다른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현대차그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혀진다. 단순히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등 3개사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편법 의혹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그룹과 관련한 제2, 제3의 대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제2, 제3의 비리 뭘까=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기아차그룹과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세 회사에 대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비자금 외의 별건 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보면 검찰이 3개 사 압수수색을 통해 경영권 승계 과정의 편법·불법 의혹과 관련된 단서를 확보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글로비스는 정의선 사장이 아버지 정 회장과 함께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현대오토넷도 정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본텍을 인수합병한 회사여서 수사의 칼날이 이들 부자의 경영권 승계 쪽으로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이 현대차그룹의 현대오토넷 매입 과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주시해오다 3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현대차·지멘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현대오토넷을 주당 3천50원씩 모두 2천371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인수 당시 현대오토넷 주가(주당 3천425원)보다 10% 이상 싼 값이어서 헐값 매입 논란을 낳았다.

검찰이 파악한 단서가 현대차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의혹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현대차는 계열사를 늘려나가면서 비상장 계열사를 정의선 사장의 개인 출자로 잇따라 세우고 그룹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줘 회사를 키우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검찰 수사대상이 된 글로비스(물류)와 현대오토넷(전자장치), 엠코(건설), 이노션(광고) 등이 모두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이 계열사들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세를 불려나갔다.

◇정회장 귀국 압박용(?)=채 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이 시작되고 20~30분 지난 뒤 불쑥 '별건 수사' 카드를 꺼냈다. "1주일 내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며 다소 여유를 뒀던 오전 브리핑보다 훨씬 강경해진 입장이었다.

채 기획관은 김재록씨 로비 의혹과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수사 일정도 당연히 늦어질 것 같다며 현대차 수사를 '발등의 불'이라고도 표현했다.

검찰은 당초 현대차그룹 수사가 김재록씨 로비라는 한 나무의 가지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가 며칠 뒤 수사가 '투 트랙'으로 변해 현대차 부분이 또 하나의 본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입장 변화로 현대차 그룹 수사는 김재록씨 로비 의혹 수사를 능가하는 핵심 본류가 돼버렸다. 검찰이 이처럼 현대차 그룹 전체의 문제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음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정 회장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제58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권력에 의한 잘못 반드시 정리해야"

盧대통령 4·3사건 위령제 첫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자랑스런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의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행사에는 4·3 유가족 등 제주도민 1만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4·3 사건을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사과 입장을 표명했었다.

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며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과거사 정리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비정규직법 4월국회서도 험로

민노당 법사위 점거 등 첫날부터 처리 진통

지난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정규직 관련법의 처리가 4월 국회에서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보여온 민주노동당이 임시국회 개회일인 3일 법사위 회의실 점거를 통해 실력저지에 나섰기 때문.

여기에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노동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외생변수'까지 잠복해 있어 관련법안 처리향배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노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20여명은 자신들이 요구해온 사용 사유제한 대신 기간제한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처리에 반발, 3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의 약속에 따라 일단 점거를 풀었지만 강행처리 기운이 감지될 경우 언제라도 재점거,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태세다.

민노당이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 법사위 사무실을 점거한 것은 지난 2월28일에 이어 두번째로, 민노당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포함, 총 10차례 가까이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을 막은 바 있다.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 대립으로 15개월간 장기 표류해온 비정규직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말인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전격 처리됐지만, 민노당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으로 회기내 처리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4월 국회로 넘겨졌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열린우리당은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6일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의 비정규직 관련법 심의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공천 하고는 싶지만…

우리당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결정 방법 우왕좌왕

열린우리당이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를 영입하고도 후보 결정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주소지를 광주와 전남으로 옮긴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과 서범석 전 교육부 차관은 이날까지 현지에서 출마 기자회견조차 못하고 있다. 후보들이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도 서울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조 전 실장은 현재 전략공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쟁 후보인 김재균 전 북구청장이 수년전부터 경선에 대비해왔고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경선은 불리한 싸움이라는 주장이다. 자신을 우리당이 영입한 이상 후보로 추대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김 전 청장측은 전략공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조 전 실장이 자유경선 참여의사를 밝히고 공정한 경선방식에 합의한다면 광주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시당위원장이 공정한 경선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맞불작전이다.

3일 조 전 실장의 한 측근은 "조 전 실장이 2일 정동영 의장과 염동연 사무총장,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추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제는 경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본선만을 생각하며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김 전 청장이 시당위원장직도 버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조 전 실장이 5일 광주에 가서 입당식과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당도 앞으로는 공정한 자유경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로는 여전히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동영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광주 자유경선을 말해놓고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선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것이 이를 나타낸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속으로는 전략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양평 워크숍에서 만나 시민여론조사로 경선하자는 중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결과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시민여론조사 경선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일단 긍정적 반응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경선 실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자, 당초 경선 참여를 하겠다고 밝힌 서 전 차관도 입장을 바꾸었다. 서 전 차관측은 3일 "광주는 전략공천하고 전남은 경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